

금배지들 '총선 대진표' 신경전

여수, 영광·함평, 강진·완도 인구상하한선 무너져...선거구 조정 불가피

〈10만5천~31만5천명〉

내년 4월 9일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광주·전남지역 선거구도 상당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가 바뀌면 '금배지'를 따기 위한 '총선 대진표'도 바뀌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과 18대 국회 입성을 노리는 예비 주자들이 벌써 치열한 눈치전에 들어가는 등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25일 각 정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광주·전남 5곳 등 전국적으로 15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17대 국회 선거구에 적용된 인구 상하한선 10만5천~31만5천명의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구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서구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갔고, 광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전남에서는 여수, 영광·함평, 강진·완도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졌다.

국회는 이에 따라 2월 임시회의에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 변경 및 선거구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광주에서는 2개의 선거구였던 서구의 통합과 함께 광산구의 2개 선거구 분할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 여수시와 영광·함평, 강진·완도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지역구 경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담양·구례·곡성, 영광·장성, 나주·함평, 화순·장흥, 영암·강진·완도 등으로 지

역구가 조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치 지형 변동에 대비해 현역의원 등 예비 주자들이 경쟁 상대와의 치열한 물밑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전남 출신 일부 입지자들은 자신이 목표로 했던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이 불투명해지자, 광주로 출마지역을 바꾸려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입지자들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참여정부 장관급 인사는 선거구가 사실상 굳혀진 광주지역 광산구와 남구에 눈길을 주다가 입지자들이 몰려들자 최근 자신의 고향인 전남 지역으로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들도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전남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은 총선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입지자에게 지역구 통제할 가능성을 흘리며 광주 출마를 권유하는가 하면, 인구 상하한선 조정으로 지역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동료 의원과의 물밑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자 입지자들의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며 "내년은 지역구 조정과 함께 다자간 대결 구도까지 예상돼 어느 때보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경숙 총장

7개 분과+1개 특위 구성



이경숙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경숙(64·여)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직 인선을 마치고 인수위 골격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당선자는 이날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 4선 의원인 김형오 의원, 인수위 대변인에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관 특보, 당선자 비서실장에 임태희 의원, 당선자 대변인에 주호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직선으로 4번이나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화합 속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총장 재임기간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과 여성이라는 점도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또 7개 분과 및 1개 특위로 구성된 인수위 조직

도도 공개했다. 인수위 참여 인원은 200명 이하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하부 조직의 큰 열거는 ▲기획 ▲정부 ▲경제1 ▲경제2 ▲외교·안보·통일 ▲사회·문화·복지·교육 ▲사법·행정 등 7개 분과와 국가경쟁력강화특위로 짜여졌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투자유치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6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서남해안특별법 오늘 의결

10개 시·도 '난개발 방지' 합의...흙 거부권 행사하기로

난개발 등을 이유로 국회 통과 후 일각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해안개발법)이 난개발 방지와 수준 높은 개발을 담보하는 내용을 보완해 개정하는 조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25일 "이상민 전남도 정부무부지사 등 연안권 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일행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성경룡 정책실장을 만나 특별법을 우선 공포한 뒤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이 이날 경관이 수려한 연안권이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상 개발지역을 최근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에 지

정, 해안과 어울리면서 친환경적이고 건축적으로 수준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해안권의 계획적 개발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등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진행·조정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개발 및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심사와 건축물 개별심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개발계획을 건축문화적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발전심사의 심의에 앞서 건축기초법에 따라 설치될 국가건축정책심의위 심의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을 즉시 개정한다는데 동의한다면 굳이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 정부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에 접한 전국 10개 시·도 73개 시·군·구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개발 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지역 변경과 산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개발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가 의제처리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분주한 세월

정해년(丁亥年)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일은, 새해의 희망을 다듬는 일이기도 하다.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세월의 분주함을 말해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물리Ⅱ 1,016명 등급 상향 타과목 수험생 역차별 반발

수능 화학 I 도오답 시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오답 논란을 빚었던 수능 물리Ⅱ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물리Ⅱ 등급이 상향 조정된 학생들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화학 문제에도 이상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검점으로 등급이 올라간 수험생은 ▲2-1등급 52명 ▲3-2등급 108명 ▲

4-3등급 115명 등 1천16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26일 오전 10시까지 개별 수험생에게 재산정된 등급표가 배부되도록 하는 한편, 28일까지 정시 모집 접수마감일을 늘릴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그러나 물리Ⅱ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평가원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다.

평가원 사이트에 글을 남긴 네티즌 '박한조'는 "가뜩이나 등급제로 인해 형평성도 없어졌는데 물리Ⅱ 등급 전체 재조정도 아니고 상향 조정만 한

다는 건 다른 수험생들은 대학 가지 말란 소리냐"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리Ⅱ 선택자 모두의 등급을 새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수험생은 "다른 학생들도 동일하게 28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대입일정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또 다른 과학탐구영역인 화학Ⅰ 5번 문제도 오답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문제 '보기'의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동대응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

중부세 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 검토

한나라 부동산 세제 완화

부동산 취득·등록세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가 내년 중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

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재건축 개발이익 환산장치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먼저 확실히 정비한 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항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부동산세제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현행 6억원의 9억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다른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UMHO TIRES

함께 하는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클래스타이어, 아름다운 정평을 합니다.